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강원도 정동진의 힘찬 일출〉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 박건울 경장님 작

7·8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독일경찰

위원회 FOCUS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편

위원회 시책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2022년 **7·8**월

발행일 | 2022년 8월 25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독일경찰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정의와 자유의 독일을 위하여

독일의 행정구역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으로, 그 이름과 같이 16개 주(州)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또한 주(州)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합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분	도 (Kreis/Landkreis)	광의의 게마인데 (Gemeinde)	
		광역시 (Kreisfreie Stadt)	시군 (협의의 게마인데)
기능	게마인데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기능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무 담당	
		인구 20만 명 이상	몇백 명 ~ 20만 명
재원	조세권 직접 행사불가/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연방 및 주(州)로부터 재원 조달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 행사	



독일경찰 제도 개요

독일 경찰은 1871년 독일의 제1대 수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지방경찰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1919년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 의해 지방분권적인 경찰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히틀러가 등장하면서부터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게슈타포'(Gestapo)라고 불렸던 비밀국가경찰이 나치의 체제 강화를 위해 활동하면서 국가경찰 중심의 체제로 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9년 제정된 독일헌법은 △관세와 국경보호 △연방수사 △헌법보호 등 경찰과 관련한 연방의 입법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경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주(州)에 배타적 입법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각 주(州)별로 경찰법을 제정, 경찰조직을 설치하여 현재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연방경찰과 주(州)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치마 길이를 확인하는 바이마르 공화국 경찰〉

연방경찰 Bundespolizei



연방경찰은 연방내무부장관 소속으로 △ 연방경찰청(舊 국경수비대) △ 연방수사청 △ 연방헌법수호청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관의 인력은 '21년 기준 4만여명 규모입니다.

연방경찰청

▶ 국경수비를 주업무로 하면서, △대테러 업무 △항공경비 △해상경비 △형사범 수사 △안전과 관련한 특수 상황 발생 시 주(州) 지원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

연방수사청

▶ 여러 주(州)에 걸쳐 벌어지거나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테러범죄·마약범죄·무기 및 위조지폐거래범죄에 대한 형사 소추 등의 업무 수행

연방헌법수호청

▶ △국가방첩 △반국가단체 △스파이 등의 감시 담당 및 정보수집,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 이첩

주(州)경찰 Landespolizei



연방경찰과 주(州)경찰은 상호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州)경찰관의 인력은 '21년 기준 21만여명 규모입니다.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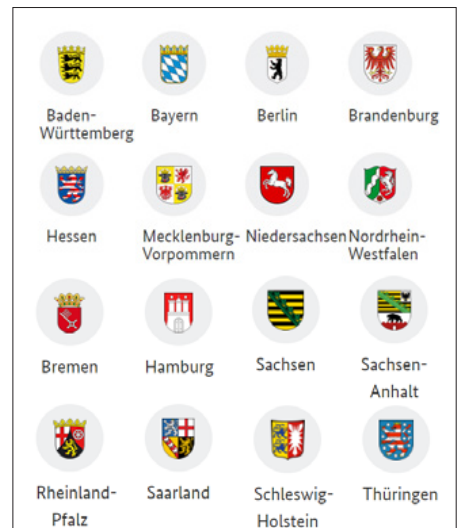
주(州) 경찰은 내무부 소속으로 운영되며, 주(州) 내무부장관은 경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도·광역시·시군)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두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및 바이에른주는 주(州) 내무부 직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설치하고 경찰서를 없애 지방경찰청에 곧바로 지구대(파출소)가 소속되는 구조입니다.

헤센주의 경우 주(州) 내무부-지방경찰청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주(州) 내무부-경찰서 및 도의 2단계 구조이며, 또한 두 주(州) 모두 관구*에 지방경찰국(직접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지원, 통제 업무 등을 수행)을 두고 있습니다.

* 관구(Bezirk/Regierungsbezirk)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州)의 일선 행정구역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바덴뷔르템베르크주·바이에른주·헤센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 4개 주(州)에 모두 19개의 관구 존재)

<주(州) 경찰 마크>



2 사무



독일의 주(州)경찰체계는 일반경찰 또는 집행경찰로 불리는 주(州)경찰과 질서관청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찰사무 분담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형의 경우 바이에른주 등 12개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형 주(州)경찰체계는 일반경찰(주(州)경찰)이 급박한 위험방지, 수사, 집행원조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무만 수행하고, 질서관청(지방자치단체)은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영업규제, 건축, 수질관리, 전염병, 가축위생, 토질이나 쓰레기관리 등 주(州)에서 위임한 사무를 일반행정적 위험방지사무로 수행하면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업무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질서관청 이외에 건축, 환경과 같은 분야의 위험방지사무를 관할하는 특별질서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 헤센주를 제외하고는 질서관청에 속하는 질서공무원을 경찰이라고 칭하지는 않음

주(州)경찰체계 중 분리형을 택하고 있는 곳은 명시적으로 일반경찰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질서관청이 모든 위험방지권한을 갖는다. 즉, 일반경찰보다 일반행정적인 질서관청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있어서 원칙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는 경찰조직의 직무범위 축소를 의미하며, 2차 대전 이후 연합국 점령 지역에서 행해진 이른바 탈경찰화의 결과이다.



통합형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 4개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州)경찰체계입니다. 이는 일반경찰(주(州)경찰)이 앞서 분리형 주(州)경찰체계에서 설명한 질서관청 등이 담당하는 일반행정적 위험방지사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통합형에서도 주(州)경찰 내에 질서공무원을 두고, 일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체의 위험방지사무를 질서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3 질서관청과 도시경찰

한편, '질서관청', '질서공무원' 외에 일부 주(州)에서 두고 있는 '도시경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질서관청

- ▶ 질서관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주(州)에서 위임한 사무, 따라서 주(州)의 전면적 감독을 받으며 예산도 독립되어 있지 않음

도시경찰

-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헤센주에서는 내근 질서공무원 외 외근 집행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주(州)법률에 두고 있음. 이때 해당 외근 집행공무원을 '도시경찰'로 부르기도 함
 - 실제 도시경찰을 둘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결정사항(임의적 설치), 따라서 도시경찰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의 조례를 통해 설치 결정
 - 도시경찰은 제복을 착용하고 순찰하며 단속과 규제를 하는데,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총기는 없으며,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가지지 못함. 주요 단속 대상은 야간소란행위,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 놀이터 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 다만, 도시경찰의 사무만큼 주(州)경찰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으며, 주(州)경찰과 도시경찰이 중복으로 수행하는 체계
 - ※ 긴급성 등 도시경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주(州)경찰 수행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

헤센주는 질서관청(Ordnungsamt)에 속하는 질서경찰을 2007년부터 도시경찰로 변경하고, 일반 형사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제외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체류, 불법조업 단속,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음주행위, 사행행위, 불법성매매, 교통규제, 집회신고, 총기허가, 거주지 등록과 같은 위생, 영연, 환경, 소음 등 예방경찰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이들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상자의 불심검문, 체포나 영치, 퇴거명령 등의 경찰권뿐만 아니라 장구 사용 기타 물리적 강제조치권도 가지며 집행경찰과 유사한 푸른 제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타며 순찰활동을 한다.

연방경찰과 주(州)경찰의 관계

연방경찰의 지휘·감독 및 조정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연방경찰과 주(州)경찰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및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州)는 다른 주(州)경찰과 연방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긴급사태가 한 주(州)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경우 연방은 연방경찰의 투입은 물론 다른 주(州)들의 경력준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州)가 긴급사태에 스스로 대응할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은 해당 주(州)경찰과 다른 주(州)경찰을 지휘 하에 둘 수 있습니다.

연방경찰과 주(州)경찰 간의 협력

채용 및 교육



‘연방경찰 → 주(州)경찰’로의 소속전환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며, 주(州)경찰간 인사교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주(州)별로 다른 경찰법 적용). 또한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경정급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교육 기간은 △순경급 30개월 △경위급은 36~45개월 △경정급(2년)으로 구성됩니다.

※ 경위급 임용 : 내부승진 및 신입선발 ⇨ 경찰대학 혹은 행정대학의 경찰학부 학위 취득 필요

경정급 임용 : 사법시험 합격자 및 내부승진 ⇨ 독일경찰대학원의 석사 학위 취득 필요

긴급경찰신고시 대응체계

경찰신고센터의 신고번호는 ‘110’으로 1973년부터 독일 전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경찰과 소방이 한 건물내에 통합 근무하는 ‘지역협력신고센터’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업

무가 통합된 것은 아니어서 110과 112(소방)에서 각각 별도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주(州)의 사무이고, 소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만약 도시경찰의 담당업무를 주(州)경찰에 신고하였다면 도시경찰 신고센터로 이관됩니다.

주(州) 내무부장관 협의회

주(州) 관할을 넘어서는 사무의 협력을 위해 195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공공안전이며 연방내무부장관도 초청자로 참여하지만 투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협의회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사항은 독일 전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나 실제로는 정치적 효력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등 연방이나 주(州)의 후속조치 필요

기타 업무협력 및 교류

연방·주(州) 공동으로 각종 센터(테러 공동방어센터, 통신감시업무 공동센터 등)를 설치·운영합니다. 또한 관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州)간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순항하다

푸른 산과 바다의 고장 강원도에서는 '21. 4. 2.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품고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도민 안심거리 조성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도민·현장 체감형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하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 정책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최일선 치안현장인 지구대·파출소였습니다. 송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구대·파출소의 복지와 사기진작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1~2022년 도비 총 12억원(각각 6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근거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업예산·기간

- ▶ 총 12억원 / <1차> '21. 7~12월 / <2차> '22. 2~10월

지원대상('22년)

- ▶ 지구대·파출소 총 156개소(지구대 31, 파출소 74, 치안센터 51)

지원내용

- ▶ △냉난방기, 세탁기 등 전자제품 △책상, 수납장 등 가구
- ▶ △복합기 등 사무용품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등 주방용품
- ▶ △기타 각 지역경찰관서별 필요 물품 구매

자치경찰 정책은 수요자로부터 「강원도자치경찰 도민참여단」 구성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도내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함께 하는 '강원도자치경찰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22. 6. 28.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자치경찰 정책 수립 시 사업을 발굴하고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행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로써 도민참여단은 강원도 자치경찰 정책의 길잡이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도민안심거리 조성 사업」 추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경찰청·강원도와 함께 112신고 현황 및 범죄발생 통계를 분석한 후 집중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을 안전한 거리로 변화시키는 '도민안심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의 합동 점검을 거쳐 △춘천·강릉·태백 등 도민안심구역 4개소 △동해 등 10개 지역 내 도민안심귀갓길 43개소 등을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에 연말까지 CCTV, 비상벨, 로고젝터, 다기능 가로등, 노면표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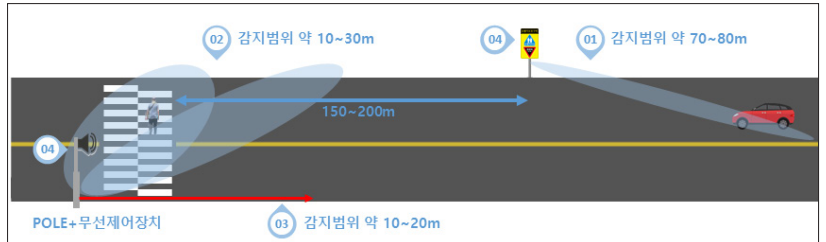
과학에 치안을 더하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시행

01 차량감지 센서

- 차량 감지 후 보행자스피커 음성메세지 알림
- 감지범위 약 70~80m

02 인체감지 센서

- 건물목 주위 보행자감지 시 차량전광판에 보행자 주의 메시지 표시
- 감지범위 약 10~30m



03 횡단감지 센서

- 횡단횟수 카운트 및 저장
- 감지거리 약 10~20m

04 알림장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스피커 음성메세지 알림
- 운전자의 인지를 위한 표지판 주의메세지 표시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 내 도로에서는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가 참변을 당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운전자가 차량을 감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민에 집중하는 강원형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는 예술이다 - 강원형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위하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해 4월 2일 공식 출범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일곱 분 위원을 비롯하여 사무국의 도청공무원과 강원경찰청의 파견경찰관이 마음을 합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이켜 보면 1년 3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조차 처음 일할 때처럼 매사 편안하지 않다. 김구 선생이 인용해서 널리 알려진 구절처럼 지금 가는 길이 “눈 내린 밤 들판을 걷듯” 사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흔한 대응이 현재의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한계를 거론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반추해 보면 제도적 한계는 명확하다. 그렇지만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도 적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물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창의적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그런데, 나 자신도 주변을 닦달해보지만 이 ‘창의적 접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다른 위원회의 활동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종종 견문질한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스마트 보행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을 배

정받았는데, 다른 위원회의 사업목록을 살펴보니 CCTV를 비롯해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이 대부분이다. 주민의 치안복지를 제고할 신박한(?) 상상력이란 게 참으로 만들어내기 힘들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민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리·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강원경찰청이 이 임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도와야 한다. 따라서 추진목표를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높여 잡고, 구체적으로 ‘**안심환경, 교통안전, 생활안녕**’의 ‘**3안(安)운동**’의 기치 아래 구체적 실천과제를 정하여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서 강원도의 문제점은 시골의 마을 앞길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작년 6월 춘천 근교에서 어르신 한 분이 마을 앞길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차량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피해자 분은 15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강원도 전역에 걸쳐 **마을 앞길 위험구간**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여덟 곳은 **도로 개선과 시설보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 중 세 곳은 올해 도비 예산

을 편성하여 IT업체의 기술적 협력 하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름 창의적 시책인데 성과가 좋으면 확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치안에서 또다른 중요성은 여름철 피서지 관리 문제이다. 매해 여름철 2,000만명 이상이 동해안의 해수욕장과 심산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익사사고와 성범죄 예방이 긴급해서 피서철에는 “여름경찰관서”를 별도로 개설한다. 올해는 도비 예산 지원으로 동해안 피서지 내 모든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칸막이 하단의 공간을 막아 불법촬영 방지)을 설치하고 **불법촬영예방 점검도** 마쳤다. 이를 위해 작년에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를 순회하면서 **불법촬영예방 조례 제정**을 독려했는데 지금까지 16개 시군에서 통과되었다.

작년과 올해에 한 일 중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사업은 아마도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일 것이다. 실제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근무자들로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훨씬 우호적**으로 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거창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일원화 자치경찰제나 이원화 자치경찰제나”라는 의제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치안서비스 제고는 순식간에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소가 발 갈 듯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일임을 느낀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실시 이후 계속 논란이었던 “일원화 자치경찰제나 이원화 자치경찰제나”라는 문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초미의 과제로 떨어졌다. 지난 대선과 지선이 진행되던 와중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가 여야 양 진영 모두로부터 제기되고 강원도특별자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호기를 잡았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개념은 이전에 논의

되기는 했지만 그 목적과 방식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치경찰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출발한 제주도와 달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폐지하기 힘든 만큼 제주도와 또다른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조금 급작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이고 도 차원에서도 준비가 덜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일정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작년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제목을 “**제도는 예술이다**”라고 붙인 적이 있다. 예술가들이 한 번에 걸작을 내는 법은 없다. 원고지에 직접 글을 쓰던 시절 한 소설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등단하기까지 무수한 습작을 썼는데 그때 쓴 습작원고가 라면 박스 몇 개가 되더라.

좋은 작품은 끝없는 시행착오 끝에 겨우 나오는 법이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이제 일 년 되었으니 결코 실망할 일도 아니고 크든 작든 꾸준히 바꾸어 나가다보면 강원도민이 만족할 형태를 갖출 것이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하의 강원형 자치경찰제**” 구상은 당장 코앞에 닥쳤다. 전국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지혜를 구해본다.



송승철 위원장 약력

1954년생
미국 남캐롤라이나대학 철학박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現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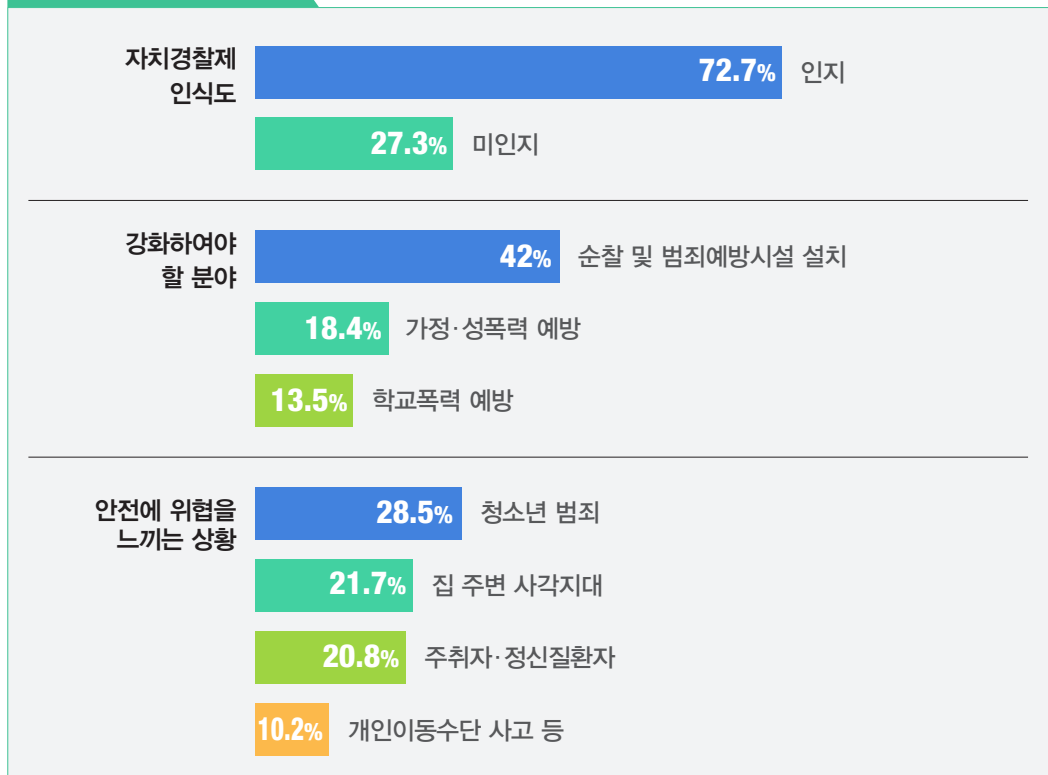
자치경찰 현장에서 지금

부산·전북·인천 공감받는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6. 22.~6. 29, 시민 1,000명 대상) 및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7. 4.~7. 22, 도민 2,200명 대상)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온·오프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전북도 설문 결과는 분석 중(8월말 완료 예정)

부산시 주요 설문 결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7. 4.~8. 16, 시민 1,004명 대상)에서는 시민 체감안전도를 측정하고 안전 위협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요 설문 내용

자치경찰제 인식도	△제도 인지 여부 △제도 효과성 △제도 시민 참여 방안 등 4개 문항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 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정책에서 교통안전·아동학대·학교폭력 중 성과 우수 분야 등 2개 문항
주민 생활 안전도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도 △필요한 범죄예방 활동 등 3개 문항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도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 4개 문항
지역 교통 안전	△거주지역의 교통 안전도 △필요한 교통안전 활동 등 4개 항목

광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관련 대민 홍보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방송사 및 TBN 교통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 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10개 시내버스 회사와 76개 법인 택시회사 등 총 110여 곳의 여객운수사업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경기도남부 '2022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개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2022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강사: 경찰대학 서준배 자치경찰연구원장 등). 해당 아카데미는 7. 13. 수원 삼일공고 경찰사무행정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7. 19. 한전KPS 및 한전KDN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피해자 및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지적장애인 주거지 주변 CCTV 설치 △소외된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전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개선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마다 다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시행 권고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시·군에서 교통비 20만원 상당을 지원하지만 △군산시 (10만원 지급) △완주군(책임보험 가입자로 대상 제한) △부안군(지역 사랑상품권 지급)과 같이 상이한 지역도 존재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세종 금강변 주변 교통대책 관련 협의

문제점

횡단보도 간 거리가 멀어
시민 불편 및 무단횡단이 빈번

개선 대책



금강보행교 남측 입구 인근
신호등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

문제점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은
면밀한 전방 주시가 필요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낮은 제한속도로
인해 차량 계기판에 시선 집중,
사고 위험 증가

개선 대책



금강변 일부 보조간선도로(3개 구간)
제한속도 상향(20km/h → 30km/h)

자치경찰 PHOTO NEWS



경기도북부·경북·전남·전북·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경기도북부(7.11.), 경북(7.18.), 전남(7.21.), 전북(7.25), 충북(7.27) 등 5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위원회 성과보고 및 향후 비전 설명 △홍보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북부에서는 경찰관, 청년 서포터즈 등이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었다.



세종·울산·대전·서울·전남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세종(6.3), 울산(7.5), 대전(7.6), 서울(7.12), 전남(7.14) 등 5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제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 주요 논의 사항

세종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 모형 및 실행 전략 △시민지향적 시책의 발전 방향
울산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울산경찰 시민 인식도
대전	△대전자치경찰 1년과 향후 발전 방향 △과학치안과 대전자치경찰
서울	△서울자치경찰 1년의 발자취 및 시민 인터뷰 △자치경찰 정책 포럼
전남	△전남자치경찰 1년의 성과와 과제 △섬 지역 범죄 보도 방식에 대한 개선점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방향설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우지완 총경)은 이원화 모형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7. 2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 자치경찰위원회 및 형사정책연구원·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원화 모델 추진 방향과 장·단기 로드맵을 고민하는 한편, 인사·재정 등 현행 일원화 모델의 개선·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 대상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에서는 7. 28.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국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관의 정원 확대 및 8월말 종료 예정인 파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것으로, 그간 행안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던 내용과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이해’ 현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추진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에서는 '21. 4월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 등 기관별 희망 수요에 따라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주로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일반직 △시·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 △역대 정부 추진 사항 등 도입 연혁 △경찰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경과 △시행 이후 성과 등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수강 완료 '22. 4~7월간 총 26회 3,275명(경찰관 3,153명 / 일반직 122명)

현장교육 수강 예정 '22. 8월 중 총 3회 260명(경찰관 231명 / 일반직 29명)

이후 9월에는 총 6강(시간 분량)으로 구성된 사이버강의 제작도 완료됩니다. 해당 강좌는 경찰 내부망 사이버교육포털 등재와 함께 '22. 9월 직장교육에 편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이버 강의 구성

- ①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및 추진 연혁 ②자치경찰사무
- ③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④시·도자치경찰위원회II ⑤예산과 후생복지
- ⑥△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의 성과 △향후 기대되는 변화상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기고문 안내

자격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자치경찰 관련 무엇이든

제출 방법

소속·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경사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2022년 7·8월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발행일 2022년 8월 25일 No. 11

발행인 김성희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